

1991년 12월 17일 제122회 참의원 법무위원회

○ 일시: 1991년 12월 17일(화) 오전 10시 개회

○ 발언자:

- 이토히사 야에코(糸久八重子) 의원(일본사회당 소속 참의원 의원)
- 다와라 다카시(田原隆) 국무대신(자유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, 법무대신)

○ URL: <https://kokkai.ndl.go.jp/#/detail?minId=112215206X00219911217&spkNum=7¤t=28>

○ 해제(개요 및 특징)

조선인 종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전후책임에 관한 법무대신의 소견을 묻는 이토히사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다와라 대신은 지극히 미온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즉답을 회피하고 있음.

○ 주요 내용 번역

▷ **이토히사** “올해는 류타오후(柳条湖) 사건¹⁾으로부터 60년, 그리고 아시아-태평양 전쟁 개전 50년이 되는 해입니다.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일본 군국주의에 희생된 아시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고, 손쉬운 배상이나 경제협력으로 전후처리만 했을 뿐 전후 보상을 성실하게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

그중에서도 조선인 **종군위안부** 문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최대의 희생을 낳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, 오늘날까지 역사의 어둠 속에 계속 은폐되어 왔습니다. 우리 사회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해왔으며, 지난 11월 16일에는 심포지엄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. 오늘날 이 문제는 일한 양국 간의 정치·외교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**종군위안부** 문제를 포함해 전후책임에 대한 대신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.”

▷ **다와라 국무대신** “답변드리겠습니다.

과거의 끔찍한 전쟁이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주었다는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만, 전후책임 문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성(省)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, 아무래도 우리 성의 소관 범위를 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좀처럼 쉽

1) 류타오후(柳条湖) 사건 : 1931년 9월 18일 일본 관동군이 선양(沈陽)의 류타오후를 지나 남만주 선로를 폭파하고는 이를 중국 측 소행이라고 몰아붙여서 ‘만주사변’의 계기가 된 사건.

게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.

인권 옹호적인 의미에서 질문하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, 우리 법무성으로서도 인권옹호국(人權擁護局)이 생긴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고, 그 당시로 소급하는 것도 불가능해서, 대신으로서는 좀처럼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.”